

# 한전, 정전사고 관련임원 9명 징계

감봉에 직위해제 · 경고조치 ... 1시간 이상 정전시 기본요금 감액 추진

한국전력은 제주와 부산 등에서 잇따른 대형 정전사고와 관련해 임원 등 관계자를 징계하고 정전피해 배상 문제도 고객 입장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한준호 한전 사장은 4월24일 최근의 정전사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임원인 송변전본부장의 6개월 감봉조치를 비롯해 광주·부산·대전 전력관리처장 직위해제, 제주지사장 엄중경고 등 5명을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원자력본부장 견책, 제2발전소장 감봉의 인사조치를 했고 남동발전과 한전기공은 각각 여수화력발전처장과 여수지점장을 직위해제했다.

한전은 정전사고가 재발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내용으로 된 한준호 사장의 긴급훈령을 발령하고 처장급 이상 간부 및 발전기업 경영진 등 180명에 대해 책임과 의무의 성실히행 및 경영상의 처벌을 감수하는 서약서를 받았다.

한준호 사장은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을 정비해 정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고가 난 뒤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정전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3시간 이상 정전시 기본요금을 감액하는 전기공급약관 기준을 1시간 이상 정전시 기본요금 감액으로 개정을 추진해 안정적인 전기공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처장급 이상 간부 107명의 재산등록제를 시행해 청렴도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한전은 제주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8월31일까지 비상전력공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손상된 제2번 해저케이블을 6월말까지 복구하고 건설중인 남제주화력3호기(10만kW)도 6월에 조기 가동키로 했다.

또한 80개 주요공단 변전소에 대한 일제점검과 송전선로 순시 강화에 나서고 가스 절연개폐기(GIS) 등 장기간 사용한 기기의 전면교체 및 보강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26>